

대학출판부의 영위와 경영의 과제

대학출판부, 학술출판시장에 속속 '도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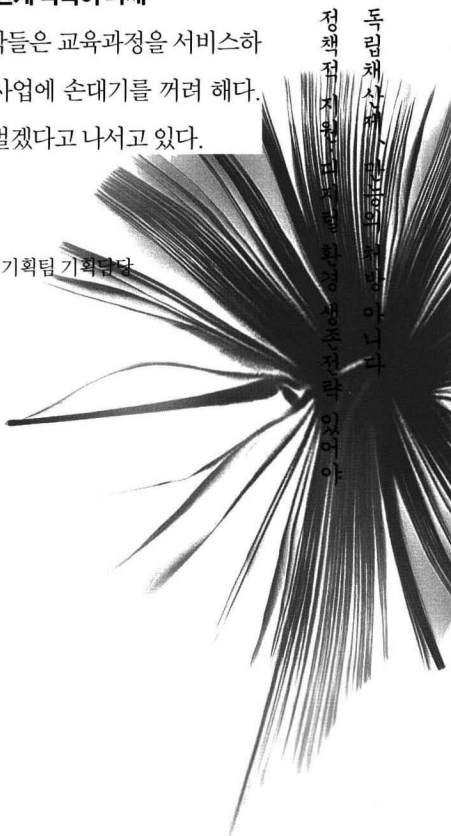
대학의 주요 기능은 지식과 정보의 생산·보급·저장에 있으며, 대학출판부의 역할과 사명은 대학의 연구 성과를 여러 형태로 출판함으로써 학문의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며 아울러 교육에 공헌하는 것이다. 즉 대학출판부는 모체대학에서 생산된 지식과 정보를 출판을 통해 정리·보급하는 부서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학술출판이 필연적으로 대학출판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구 대학교육 도입과 함께 시작된 학술출판이 초기부터 상업출판사들의 손에 맡겨져 대학출판부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지금까지도 대학출판부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최근에 상업출판사들의 학술서 출판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출판부들이 독립채산제를 선언하며 출판시장에 속속 도전장을 내민 것은 아주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대학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출판사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독립채산제, 조직·경영의 구조적 한계 극복이 과제

매우 보수적인 집단인 국내 대학들은 교육과정을 서비스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수익사업에 손대기를 꺼려 했다. 그런데 이제 출판을 통해 돈을 벌겠다고 나서고 있다.

김정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기획팀 기획담당



여기서 독립채산제란 대학의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조직을 운영해 가는 것인데,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재정과 조직을 완전히 독립시킨 형태(법인 분리 포함)이고, 또 하나는 재정만 분리하고 조직·인사는 대학과 통합운영(인건비는 대학에서 지급)하는 형태다. 이 두 방식은 국내의 많은 대학들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직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늬만 독립채산제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째, 경영구조에 문제가 있다. CEO격인 출판부장의 임기를 국립대학 교수 보직기간인 2년에 맞추는 현 제도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차치하고라도 장기적인 기획의 추진과 책임경영을 어렵게 한다. 둘째, 최소한의 인원과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대학출판부협회에 가입한 회원 출판부 85 곳의 평균 직원수는 4명이 채 못 되고,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 90퍼센트가 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독립채산제를 전제로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수익 일변도 출판, 맹목적 상업성 추구 우려

그렇다면 대학에서 생산해낸 지식과 정보의 수준은 어떠한가? 자생적 연구 실적이 빈약하기 때문에 국내 학술도서는 양과 질에서 그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수요자가 필요한 책이 기획되지 못하고, 교수가 자기 업적을 위해 필요한 책을 만드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학술도서를, 더군다나 영어가 아닌 한글로 집필된 학술도서를 그냥 시장에 내던지는 것은 개미 한 마리를 망망대해에 내동댕이치는 꼴이다.

이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대학당국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독립채산제를 해야 대학출판부가 발전한다고 한다. 물론 발전할 수 있다. 독립채산제를 하게 되면 출판부는 생존을 위해 한층 대중적인 기획과 마케팅을 하고 상업출판사를 닮아 가게 될 것이다. 혹은 거꾸로 목전의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 수첩, 달력 등 잡다한 인쇄물 제작 대행에 매달리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일본 대학출판부들의 운영방식과 처지가 우리와 비슷하다고 한다. 다만, 출판시장 전체에서 도서관이 구입해 주는 비중이 미국 20퍼센트, 일본 7퍼센트 수준인 데 비해 우리는 1퍼센트이니 우리보다 한결 나은 편이다. 그런데도 일본 대학출판부에서는 학술출판의 지속을 위해 일본학술진흥회 같은 공공기관과 일본생명 같은 기업들의 지원금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그러면 밀지는 학술출판은 누가 하나? 일반 대중 독서를 많이 판매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학술출판에 재투자를 한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익사업의 속성과 대학의 의사결정 관행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장밋빛 로드맵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금세 눈치챌 것이다.

국가 프로젝트 및 공공기관 추천 도서 출판 지원 등 대안 절실

국가의 흥망이 지식의 축적과 인재 양성에 있다면 그 일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해야 한다. 제도권 교육이 그렇고 학술출판도 여기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공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설픈 시장논리를 들이밀기 전에 현재의 학술출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발전시킬 만한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선,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나 대학이 지원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지원비 안에 출판비용까지를 포함시켜 책을 의무적으로 내게 하는 방법이다. 그냥 보고서로 내는 게 아니라 출판부를 통해 판매용으로 출간하게 하지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공신력 있는 기관, 예를 들어 문화관광부라든지, 학술원, 간행물윤리위원회 같은 곳의 추천을 받으면 그 책의 제작비를 대학에서 출판부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다.

학술출판 시명위에 새로운 출판사업 모델 찾아야

모든 경제주체가 무한경쟁과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뛰고 있고 대학출판부들도 이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향후 국내 대학출판부들은 학내 사업부서로서 수익을 중시하는 독립형·기업형 출판부가 되거나 대학의 목적사업을 중시하는 모체대학 밀착형·비영리형으로 양극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형태로 가든 e-learning이나 e-book 등 제작방식 개발과 채산성을 개선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학술출판이라는 사명을 대학출판부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출판부가 교육과 학문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점을 대학 당국이 알아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투자금의 회임기간을 고려하여 독자적 기회물을 출판할 정도의 매출액 규모가 달성될 때까지는 제작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1478년에 첫 책을 낸 옥스퍼드대학 출판부는 연간 4,500여 종의 신간을 내며 직원이 3,700명에 달하고 연 매출액의 30퍼센트를 대학에 넘기는데 그 액수가 200억 원을 넘는다고 한다. 500년이 넘는 출판부와 우리를 단순 비교할 수야 없겠지만, 사표로 삼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대학출판부 구성원들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원칙을 지키면서 새로운 출판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도 세계적인 대학출판부를 갖게 될 것이라 믿는다.